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1교시	1 민법 2 경제원론	80분	A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3.28)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④ 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2.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경과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 그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첫번째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미성년자와 체결한 영업상의 계약은 유효하다.

③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더라도 미성년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그 행위 당시 알았던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④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갖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5.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洞)·리(里)의 명의로 사정(査定)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③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主壁)을 갖추어야 한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7.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어도 종물이다.

②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의 종물이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了知)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④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무능력자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10.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규정이 적용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4.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어느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丙이 선택한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乙은 이 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丙이 선의인 경우 그는 甲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임이 원칙이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7.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

②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기간만료 전에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④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제3자가 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2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 타인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없다.

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권리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래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23.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甲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갖지 못한다.

④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행사하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4.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된다.

④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되지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가능하다.

③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상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 갖추어진 때이다.

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고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6.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②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③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취득한다.

④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27.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③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일정 기간 이상의 점유

② 무과실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등기

⑤ 평온한 점유

2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0. 제한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지역권 ⑤ 분묘기지권

3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②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④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⑤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다.

3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③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토지 소유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토지위에 가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지역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②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③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⑤ 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35.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③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7.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봉분(封墳) 형태로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봉분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②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雙墳)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라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그 기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나, 주식은 질권의 목적이 된다.

② 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채권질권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동산질권이다.

④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39.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에는 미치나, 적법한 토지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그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매각허가 결정은 적법하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40.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의 채권자는 2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② 동산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자신의 동산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양수한 자는 현실로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집합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목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제원론

41. 완전경쟁시장 A의 수요함수가 $Q_D = 30 - 3P$이다.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4로 동일할 때 시장의 균형가격(P^*)과 균형 거래량(Q^*)은? (단, Q_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며, 모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P^*=3, Q^*=10　② P^*=3, Q^*=21
③ P^*=4, Q^*=18　④ P^*=4, Q^*=22
⑤ P^*=6, Q^*=12

42. 발전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석탄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공급된다면 석탄의 시장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는?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석탄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 하락, 생산량: 증가
②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③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④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⑤ 가격: 불변, 생산량: 증가

43.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위험애호적(risk-loving)인 사람의 폰 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von Neumann Morgenstern utility function)는 (ㄱ)함수이며, (ㄴ)이(가) 기대소득보다 크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0보다 (ㄷ).

①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크다
② ㄱ: 볼록,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③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④ ㄱ: 오목, ㄴ: 확실성등가, ㄷ: 크다
⑤ ㄱ: 볼록, ㄴ: 확실성등가, ㄷ: 작다

44.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2x, y\}$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①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0이다.
②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③ 가격소비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④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⑤ 甲의 효용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45. 두 생산요소 자본 K와 노동 L을 투입하는 A기업의 생산함수가 $Q = (\min\{L, 3K\})^{0.5}$로 주어져 있다. 산출물의 가격은 p, 노동의 가격은 $w = 4$, 자본의 가격은 $r = 6$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의 공급(Q_S)곡선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① $Q_S = p \times min\{w, 3r\}$　② $Q_S = \frac{p}{12}$
③ $Q_S = p \times max\{w, 3r\}$　④ $Q_S = 6p$
⑤ $Q_S = \frac{p}{6}$

46. 세 사람 A, B, C로 이루어진 어떤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세 사람의 수요함수(Q_A, Q_B, Q_C)는 각각 $Q_A = 10 - P_A$, $Q_B = 10 - \frac{1}{3}P_B$, $Q_C = 5 - \frac{1}{2}P_C$이고, 공공재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P_A, P_B, P_C는 A, B, C가 공공재에 지불하는 가격이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47.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0 - P$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_S = P$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단위당 10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조세수입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　② 2,500　③ 5,000　④ 7,500　⑤ 9,000

48.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1,000원인 A재 10단위와 500원인 B재 15단위의 조합을 소비하려고 한다. 이때의 한계대체율($MRS_{AB}=\frac{MU_A}{MU_B}$)이 1.5라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甲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며, MU_i는 i재의 한계효용이다.)

① A재 10단위와 B재 15단위를 소비한다.

②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

③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야 한다.

④ A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B재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⑤ A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B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49.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위인전 A와 B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 각 위인전에 대한 소비자는 두 유형 H와 L로서 각각 50명이며, 지불용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위인전 \ 소비자 유형	H	L
A	800원	400원
B	400원	600원

출판사의 한계비용은 0원이다. 출판사는 위인전 A와 B를 개별판매할지, A와 B를 함께 묶어 결합판매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① 개별판매만 하는 경우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은 A = 800원, B = 600원이다.

② A = 400원, B = 4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개별판매할 경우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결합판매만 하는 경우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판매수입이 극대화된다.

④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소비자잉여는 H 유형에만 발생한다.

⑤ 결합판매의 최대 판매수입은 개별판매의 최대 판매수입보다 더 많다.

50. A기업의 생산함수는 $Q=\sqrt{KL}$, 자본(K)의 가격은 r, 노동(L)의 가격은 w이다. 생산량이 Q_0로 주어졌을 때, 비용이 극소화되도록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0>0$이다.)

①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1차 동차함수이다.

② 최적 상태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 투입량은 $\frac{r}{w}$이다.

③ 최적 상태에서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은 1이다.

④ 최적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w, r, Q_0의 함수이다.

⑤ 최적 상태에서 총비용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51. A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_D=400-P$이다. A기업이 가격을 10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_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frac{200}{3}$ ② 100 ③ 300

④ -200 ⑤ 30,000

52.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다.]

①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0이다.

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④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53.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성은 감소한다.

② 효용함수 $U=X+Y$는 0차 동차 함수이다.

③ 효용함수 $U=\min\{X, Y\}$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X재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 때문이다.

④ 소비자가 기펜재와 정상재에 모든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펜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정상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⑤ 효용함수 $U=X+2Y$이고,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 X재만을 소비한다.

54. 독점기업이 8,0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상품가격은 1만 원, 평균총비용은 1만 2,000원, 평균가변비용은 8,000원이며,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6,000원으로 같다. 현재의 단기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수입은 9,600만 원이다.

② 총비용은 8,000만 원이다.

③ 상품 단위당 4,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④ 생산을 중단하면 3,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55. 정상재 A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① 보완재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의 소득 증가

③ 대체재의 가격 상승

④ A재화의 가격 상승

⑤ A재화에 대한 선호 증가

56. 생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백두산수와 한라산수의 광고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백두산수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한라산수의 보수이다.)

		한라산수	
		광고함	광고안함
백두산수	광고함	(25, 15)	(30, 0)
	광고안함	(15, 20)	(40, 5)

ㄱ. 한라산수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백두산수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7.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인 A기업의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가격은 불변이며, 고정생산요소가 존재한다.)

①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은 증가한다.

②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③ 평균총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은 동일한 생산량 수준에서 최저점에 도달한다.

④ 어떤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가변비용곡선상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⑤ 어떤 생산량의 평균총비용은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비용곡선상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58.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고 있는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4x + y, x + 7y\}$이다. 수평축을 X의 소비량(x), 수직축을 Y의 소비량(y)이라고 할 때, 甲이 X재화 4단위, Y재화 7단위를 소비하는 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① -4 ② $-\frac{4}{7}$ ③ $-\frac{1}{4}$ ④ $-\frac{1}{7}$ ⑤ $-\frac{7}{4}$

59.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수입 소비재 A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시장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A의 국제가격은 교역 이전의 국내가격보다 낮다.)

①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②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③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⑤ 국내의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한다.

60.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A시장의 수요곡선은 $P = 100 - Q$이고, 사적한계비용은 $PMC = 40 + 0.5Q$이다. 생산량 한 단위당 30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생산량은 20이다.

②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40이다.

③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량 수준을 40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⑤ 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든 단위당 30의 조세를 부과하든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동일하다.

6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8, 법정지급준비율이 5%, 초과지급준비율이 5%일 때, 본원통화가 8,000억 원이면 최대 가능한 M1 통화량은?

① 8,000억 원 ② 1조 원
③ 1조 2,000억 원 ④ 1조 4,000억 원
⑤ 1조 6,000억 원

62. 실질이자율이 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일 때,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후 명목이자율과 세후 기대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① 8%, 9% ② 8%, 25% ③ 9%, 1%
④ 9%, 4% ⑤ 9%, 8%

63.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서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 보유비율이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때, 두 비율이 상수인 경우와 비교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ㄷ.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ㄹ.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4. 사과와 바나나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2년의 전년대비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한다.)

연도	사과 개수	사과 가격	바나나 개수	바나나 가격
2011	5	2	30	1
2012	10	5	40	1

① 33%, 33% ② 33%, 25% ③ 50%, 25%
④ 50%, 50% ⑤ 50%, 75%

65.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유가격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ㄹ. 적응적 기대 하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6.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B국의 총생산량이 $Y = AL^{1-\theta}K^{\theta}$으로 결정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0<\theta<1$이다.)

① 노동소득분배율은 $1-\theta$이다.
② 자본소득분배율은 θ이다.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④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 대비 자본소득분배율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다.
⑤ 생산요소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67. 유동성 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채권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된다.
③ 이자율이 매우 낮아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못하여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68.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민간저축에 변화가 없었다면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가 (ㄱ)하였다. ○ 정부저축이 (ㄴ)하였다. ○ 국민저축이 (ㄷ)하였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ㄷ: 감소
② ㄱ: 감소, ㄴ: 감소, ㄷ: 증가
③ ㄱ: 증가, ㄴ: 증가, ㄷ: 감소
④ ㄱ: 증가, ㄴ: 감소, ㄷ: 감소
⑤ ㄱ: 증가, ㄴ: 증가, ㄷ: 증가

69.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개방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내 물가 및 외국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소득 증가	ㄴ. 경상수지 악화
ㄷ. 자본유입 증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0.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질환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자국의 실질 순수출이 증가한다.
③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명목환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
④ 양국간 무역에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⑤ 양국 물가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환율에 영향을 준다.

71.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우하향하는 IS곡선의 왼쪽에서는 생산물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③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평선이다.
④ 화폐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평선이다.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72.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C=100+0.5(Y-T)$ $I=100-25r$ $G=T=100$

① $r=8-0.016Y$
② $r=10-0.02Y$
③ $r=10-0.03Y$
④ $r=12-0.04Y$
⑤ $r=12-0.05Y$

73. A국의 총생산함수는 $Y=20\sqrt{L}$, 노동공급함수는 $w=\sqrt{L}$라고 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노동량(L^*)은? (단, Y는 총생산, w는 실질임금, L은 노동량이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L^*=5$ ② $L^*=10$
③ $L^*=15$ ④ $L^*=20$
⑤ $L^*=25$

74. A국의 실업자 수가 200만 명, 취업자 수가 3,8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이 80%일 때 고용률은? [단,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이다.]

① 50% ② 65% ③ 72% ④ 76% ⑤ 78%

75. B국의 생산함수는 $Y=AK^{1/3}L^{2/3}$이다. 성장회계에 따른 2013년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연도	Y	K	L
2012	20,000	30,000	30,000
2013	22,000	32,700	31,800

① 2% ② 3% ③ 5% ④ 8% ⑤ 10%

76. 전년도에 비해 올해 통화량은 5%, 물가는 6%, 실질 국민소득은 9% 증가하였고, 전년도 화폐유통속도가 20이었다면, 올해의 화폐유통속도는?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① 18 ② 19 ③ 20 ④ 22 ⑤ 24

77.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는 경우
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ㄷ.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ㄹ.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8.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을 위탁하고, 乙은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익의 10%를 운용수수료로 받고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 甲은 자금운용을 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며 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상황에 따른 각 투자안별 수익(원금 포함)이 다음과 같을 때 乙의 투자선택과 기대운용수수료는? (단, 甲과 乙은 위험중립적이다.)

	상황 1	상황 2
확률	0.1	0.9
X 투자안	100만 원	110만 원
Y 투자안	400만 원	70만 원

①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②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③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9만 원이다.
④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⑤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79.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 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며,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C=10+0.7Y$
$I=50-r$
$G=10$
$Y=C+I+G$ (생산물시장의 균형)
$M^d=20+0.2Y-r$
$M^s=30$
$M^d=M^s$ (화폐시장의 균형)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80. 다음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물가수준-국민소득 평면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율,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P는 물가수준, π^e는 예상물가상승률, $\beta_i, i=0,\cdots,5$,는 양의 계수, M^d는 명목 화폐수요, M^s는 명목 화폐공급이며, T_0, G_0, $\overline{M}$, π_0^e은 상수이다.)

$C=\beta_0+\beta_1(Y-T)$
$I=\beta_2-\beta_3 r$
$T=T_0,\ G=G_0$
$Y=C+I+G$(생산물시장의 균형)
$\frac{M^d}{P}=\beta_4 Y-\beta_5(r+\pi^e)$
$M^s=\overline{M}$
$M^d=M^s$(화폐시장의 균형)
$\pi^e=\pi_0^e$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④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축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⑤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피구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A-14-15-[1교시]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1교시	1 민법 2 경제원론	80분	B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3.28)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④ 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2.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경과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 그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첫번째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미성년자와 체결한 영업상의 계약은 유효하다.

③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더라도 미성년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洞)·리(里)의 명의로 사정(査定)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③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그 행위 당시 알았던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④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갖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6.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어도 종물이다.

②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의 종물이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主壁)을 갖추어야 한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了知)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④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무능력자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규정이 적용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5.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어느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丙이 선택한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乙은 이 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丙이 선의인 경우 그는 甲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6.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임이 원칙이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

②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기간만료 전에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④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제3자가 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2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권리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래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2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 타인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없다.

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3.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甲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갖지 못한다.

④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행사하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4.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된다.

④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된다.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되지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가능하다.

③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상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 갖추어진 때이다.

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고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6.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②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③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취득한다.

④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27.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③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28. 제한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지역권 ⑤ 분묘기지권

29.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일정 기간 이상의 점유

② 무과실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등기

⑤ 평온한 점유

3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③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토지 소유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토지위에 가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②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④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⑤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다.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지역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②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③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34.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⑤ 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36.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봉분(封墳) 형태로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봉분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②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雙墳)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라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그 기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37.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③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나, 주식은 질권의 목적이 된다.

② 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채권질권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동산질권이다.

④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39.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의 채권자는 2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② 동산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자신의 동산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양수한 자는 현실로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집합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목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0.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에는 미치나, 적법한 토지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그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매각허가 결정은 적법하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경제원론

41. 완전경쟁시장 A의 수요함수가 $Q_D = 30 - 3P$이다.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4로 동일할 때 시장의 균형가격(P^*)과 균형 거래량(Q^*)은? (단, Q_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며, 모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P^*=3, Q^*=10　② P^*=3, Q^*=21
③ P^*=4, Q^*=18　④ P^*=4, Q^*=22
⑤ P^*=6, Q^*=12

42. 발전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석탄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공급된다면 석탄의 시장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는?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석탄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 하락, 생산량: 증가
②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③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④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⑤ 가격: 불변, 생산량: 증가

43.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위험애호적(risk-loving)인 사람의 폰 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von Neumann Morgenstern utility function)는 (ㄱ)함수이며, (ㄴ)이(가) 기대소득보다 크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0보다 (ㄷ).

①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크다
② ㄱ: 볼록,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③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④ ㄱ: 오목, ㄴ: 확실성등가, ㄷ: 크다
⑤ ㄱ: 볼록, ㄴ: 확실성등가, ㄷ: 작다

44. 세 사람 A, B, C로 이루어진 어떤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세 사람의 수요함수(Q_A, Q_B, Q_C)는 각각 $Q_A = 10 - P_A$, $Q_B = 10 - \frac{1}{3}P_B$, $Q_C = 5 - \frac{1}{2}P_C$ 이고, 공공재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P_A, P_B, P_C는 A, B, C가 공공재에 지불하는 가격이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45.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0 - P$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_S = P$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단위당 10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조세수입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　② 2,500　③ 5,000　④ 7,500　⑤ 9,000

46.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2x, y\}$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①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0이다.
②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③ 가격소비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④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⑤ 甲의 효용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47. 두 생산요소 자본 K와 노동 L을 투입하는 A기업의 생산함수가 $Q = (\min\{L, 3K\})^{0.5}$로 주어져 있다. 산출물의 가격은 p, 노동의 가격은 $w = 4$, 자본의 가격은 $r = 6$인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의 공급(Q_S)곡선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① $Q_S = p \times min\{w, 3r\}$　② $Q_S = \frac{p}{12}$
③ $Q_S = p \times max\{w, 3r\}$　④ $Q_S = 6p$
⑤ $Q_S = \frac{p}{6}$

4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위인전 A와 B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 각 위인전에 대한 소비자는 두 유형 H와 L로서 각각 50명이며, 지불용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위인전 \ 소비자 유형	H	L
A	800원	400원
B	400원	600원

출판사의 한계비용은 0원이다. 출판사는 위인전 A와 B를 개별판매할지, A와 B를 함께 묶어 결합판매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① 개별판매만 하는 경우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은 A = 800원, B = 600원이다.

② A = 400원, B = 4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개별판매할 경우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결합판매만 하는 경우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판매수입이 극대화된다.

④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소비자잉여는 H 유형에만 발생한다.

⑤ 결합판매의 최대 판매수입은 개별판매의 최대 판매수입보다 더 많다.

49.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1,000원인 A재 10단위와 500원인 B재 15단위의 조합을 소비하려고 한다. 이때의 한계대체율($MRS_{AB} = \frac{MU_A}{MU_B}$)이 1.5라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甲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며, MU_i는 i재의 한계효용이다.)

① A재 10단위와 B재 15단위를 소비한다.

②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

③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야 한다.

④ A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B재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⑤ A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B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50.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sqrt{KL}$, 자본(K)의 가격은 r, 노동(L)의 가격은 w이다. 생산량이 Q_0로 주어졌을 때, 비용이 극소화되도록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0 > 0$이다.)

①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1차 동차함수이다.

② 최적 상태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 투입량은 $\frac{r}{w}$이다.

③ 최적 상태에서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은 1이다.

④ 최적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w, r, Q_0의 함수이다.

⑤ 최적 상태에서 총비용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51.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성은 감소한다.

② 효용함수 $U = X + Y$는 0차 동차 함수이다.

③ 효용함수 $U = \min\{X, Y\}$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X재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 때문이다.

④ 소비자가 기펜재와 정상재에 모든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펜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정상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⑤ 효용함수 $U = X + 2Y$이고,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 X재만을 소비한다.

52. A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_D = 400 - P$이다. A기업이 가격을 10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_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frac{200}{3}$ ② 100 ③ 300

④ -200 ⑤ 30,000

53.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다.]

①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0이다.

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④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54. 정상재 A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① 보완재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의 소득 증가

③ 대체재의 가격 상승

④ A재화의 가격 상승

⑤ A재화에 대한 선호 증가

55. 생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백두산수와 한라산수의 광고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백두산수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한라산수의 보수이다.)

		한라산수	
		광고함	광고안함
백두산수	광고함	(25, 15)	(30, 0)
	광고안함	(15, 20)	(40, 5)

ㄱ. 한라산수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백두산수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6. 독점기업이 8,0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상품가격은 1만 원, 평균총비용은 1만 2,000원, 평균가변비용은 8,000원이며,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6,000원으로 같다. 현재의 단기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수입은 9,600만 원이다.

② 총비용은 8,000만 원이다.

③ 상품 단위당 4,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④ 생산을 중단하면 3,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57.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인 A기업의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가격은 불변이며, 고정생산요소가 존재한다.)

①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총비용은 증가한다.

②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③ 평균총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은 동일한 생산량 수준에서 최저점에 도달한다.

④ 어떤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가변비용곡선상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⑤ 어떤 생산량의 평균총비용은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비용곡선상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58.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A시장의 수요곡선은 $P=100-Q$이고, 사적한계비용은 $PMC=40+0.5Q$이다. 생산량 한 단위당 30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생산량은 20이다.

②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40이다.

③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량 수준을 40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⑤ 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든 단위당 30의 조세를 부과하든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동일하다.

59.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고 있는 甲의 효용함수는 $U(x,y)=\min\{4x+y, x+7y\}$이다. 수평축을 X의 소비량(x), 수직축을 Y의 소비량(y)이라고 할 때, 甲이 X재화 4단위, Y재화 7단위를 소비하는 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① -4 ② $-\frac{4}{7}$ ③ $-\frac{1}{4}$ ④ $-\frac{1}{7}$ ⑤ $-\frac{7}{4}$

60.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수입 소비재 A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시장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A의 국제가격은 교역 이전의 국내가격보다 낮다.)

①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②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③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⑤ 국내의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한다.

61.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서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 보유비율이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때, 두 비율이 상수인 경우와 비교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ㄷ.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ㄹ.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2. 사과와 바나나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2년의 전년대비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한다.)

연도	사과 개수	사과 가격	바나나 개수	바나나 가격
2011	5	2	30	1
2012	10	5	40	1

① 33%, 33% ② 33%, 25% ③ 50%, 25%
④ 50%, 50% ⑤ 50%, 75%

63.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8, 법정지급준비율이 5%, 초과지급준비율이 5%일 때, 본원통화가 8,000억 원이면 최대 가능한 M1 통화량은?

① 8,000억 원 ② 1조 원
③ 1조 2,000억 원 ④ 1조 4,000억 원
⑤ 1조 6,000억 원

64. 실질이자율이 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일 때,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후 명목이자율과 세후 기대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① 8%, 9% ② 8%, 25% ③ 9%, 1%
④ 9%, 4% ⑤ 9%, 8%

65. 유동성 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채권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된다.
③ 이자율이 매우 낮아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못하여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66.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유가격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단기필립스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ㄹ. 적응적 기대 하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점을 단기필립스곡선상에서 이동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7.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B국의 총생산량이 $Y = AL^{1-\theta}K^{\theta}$으로 결정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0<\theta<1$이다.)

① 노동소득분배율은 $1-\theta$이다.
② 자본소득분배율은 θ이다.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④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 대비 자본소득분배율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다.
⑤ 생산요소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68.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질환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② 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자국의 실질 순수출이 증가한다.

③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명목환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

④ 양국간 무역에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⑤ 양국 물가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환율에 영향을 준다.

69.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민간저축에 변화가 없었다면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가 (ㄱ)하였다. ○ 정부저축이 (ㄴ)하였다. ○ 국민저축이 (ㄷ)하였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ㄷ: 감소

② ㄱ: 감소, ㄴ: 감소, ㄷ: 증가

③ ㄱ: 증가, ㄴ: 증가, ㄷ: 감소

④ ㄱ: 증가, ㄴ: 감소, ㄷ: 감소

⑤ ㄱ: 증가, ㄴ: 증가, ㄷ: 증가

70.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개방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내 물가 및 외국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소득 증가	ㄴ. 경상수지 악화
ㄷ. 자본유입 증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1.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우하향하는 IS곡선의 왼쪽에서는 생산물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③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평선이다.

④ 화폐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평선이다.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72. A국의 실업자 수가 200만 명, 취업자 수가 3,8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이 80%일 때 고용률은? [단,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이다.]

① 50% ② 65% ③ 72% ④ 76% ⑤ 78%

73. B국의 생산함수는 $Y=AK^{1/3}L^{2/3}$이다. 성장회계에 따른 2013년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연도	Y	K	L
2012	20,000	30,000	30,000
2013	22,000	32,700	31,800

① 2% ② 3% ③ 5% ④ 8% ⑤ 10%

74.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C=100+0.5(Y-T)$ $I=100-25r$ $G=T=100$

① $r=8-0.016Y$

② $r=10-0.02Y$

③ $r=10-0.03Y$

④ $r=12-0.04Y$

⑤ $r=12-0.05Y$

75. A국의 총생산함수는 $Y=20\sqrt{L}$, 노동공급함수는 $w=\sqrt{L}$라고 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노동량(L^*)은? (단, Y는 총생산, w는 실질임금, L은 노동량이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L^*=5$ ② $L^*=10$

③ $L^*=15$ ④ $L^*=20$

⑤ $L^*=25$

76.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을 위탁하고, 乙은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익의 10%를 운용수수료로 받고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 甲은 자금운용을 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며 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상황에 따른 각 투자안별 수익(원금 포함)이 다음과 같을 때 乙의 투자선택과 기대운용수수료는? (단, 甲과 乙은 위험중립적이다.)

	상황 1	상황 2
확률	0.1	0.9
X 투자안	100만 원	110만 원
Y 투자안	400만 원	70만 원

①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②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③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9만 원이다.
④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⑤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77. 전년도에 비해 올해 통화량은 5%, 물가는 6%, 실질 국민소득은 9% 증가하였고, 전년도 화폐유통속도가 20이었다면, 올해의 화폐유통속도는?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① 18 ② 19 ③ 20 ④ 22 ⑤ 24

78.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는 경우
ㄴ.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ㄷ.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ㄹ.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9.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60만큼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 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며,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C = 10 + 0.7Y$
$I = 50 - r$
$G = 10$
$Y = C + I + G$ (생산물시장의 균형)
$M^d = 20 + 0.2Y - r$
$M^s = 30$
$M^d = M^s$ (화폐시장의 균형)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80. 다음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물가수준-국민소득 평면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율,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P는 물가수준, π^e는 예상물가상승률, $\beta_i, i = 0, \cdots, 5$,는 양의 계수, M^d는 명목 화폐수요, M^s는 명목 화폐공급이며, T_0, G_0, $\overline{M}$, π_0^e은 상수이다.)

$C = \beta_0 + \beta_1(Y - T)$
$I = \beta_2 - \beta_3 r$
$T = T_0,\ G = G_0$
$Y = C + I + G$(생산물시장의 균형)
$\frac{M^d}{P} = \beta_4 Y - \beta_5(r + \pi^e)$
$M^s = \overline{M}$
$M^d = M^s$(화폐시장의 균형)
$\pi^e = \pi_0^e$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④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축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⑤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피구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B-14-15-[1교시]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정답

A형 1교시

민법

1	1	2	5	3	4	4	3	5	1
6	3	7	4	8	1	9	3	10	3
11	2	12	2	13	5	14	5	15	2
16	4	17	1	18	2	19	3	20	1
21	2	22	5	23	4	24	5	25	4
26	3	27	3	28	2	29	1	30	1
31	4	32	4	33	4	34	2	35	5
36	2	37	5	38	3	39	1	40	2,5

경제원론

41	3	42	2	43	5	44	3	45	2
46	1	47	2	48	5	49	1	50	2
51	4	52	1	53	1	54	4	55	4
56	3	57	1	58	1	59	3	60	3,5
61	5	62	3	63	3	64	4	65	5
66	4	67	5	68	1	69	1	70	2
71	3	72	2	73	2	74	4	75	2
76	4	77	5	78	4	79	3	80	2

A형 2교시

회계학

1	5	2	1	3	1	4	1	5	4
6	5	7	3	8	4	9	1,2,3,4,5	10	1
11	3	12	1	13	2	14	5	15	2
16	5	17	2	18	3	19	5	20	4
21	5	22	4	23	2	24	2	25	3
26	2	27	2	28	4	29	1,2,3,4,5	30	3
31	3	32	1	33	2	34	5	35	4
36	3	37	3	38	1	39	4	40	3

부동산관계법규

41	2	42	4	43	1	44	1	45	3
46	4	47	4	48	2	49	1	50	4
51	5	52	4	53	1	54	3	55	5
56	1	57	5	58	5	59	2	60	3
61	4	62	4	63	2	64	2	65	2
66	5	67	3	68	5	69	5	70	3
71	3	72	2	73	1	74	1	75	3
76	2	77	3	78	5	79	3	80	4

B형 1교시

민법

1	1	2	5	3	4	4	1	5	3
6	4	7	3	8	1	9	3	10	3
11	2	12	2	13	5	14	2	15	5
16	1	17	4	18	2	19	3	20	1
21	5	22	2	23	4	24	5	25	4
26	3	27	3	28	1	29	2	30	1
31	4	32	4	33	4	34	5	35	2
36	5	37	2	38	3	39	2,5	40	1

경제원론

41	3	42	2	43	5	44	1	45	2
46	3	47	2	48	1	49	5	50	2
51	1	52	4	53	1	54	4	55	3
56	4	57	1	58	3,5	59	1	60	3
61	3	62	4	63	5	64	3	65	5
66	5	67	4	68	2	69	1	70	1
71	3	72	4	73	2	74	2	75	2
76	4	77	4	78	5	79	3	80	2

B형 2교시

회계학

1	1	2	5	3	1	4	1	5	1
6	3	7	1	8	2	9	5	10	4
11	5	12	3	13	4	14	1,2,3,4,5	15	2
16	2	17	4	18	1,2,3,4,5	19	3	20	2
21	5	22	2	23	3	24	5	25	4
26	5	27	4	28	2	29	2	30	3
31	1	32	3	33	4	34	2	35	5
36	3	37	3	38	3	39	1	40	4

부동산관계법규

41	4	42	2	43	4	44	1	45	1
46	3	47	4	48	4	49	1	50	2
51	1	52	4	53	5	54	5	55	3
56	5	57	1	58	2	59	5	60	2
61	3	62	4	63	4	64	2	65	5
66	2	67	5	68	3	69	5	70	3
71	2	72	3	73	2	74	1	75	1
76	3	77	4	78	3	79	5	80	3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정답

부동산 관계법규									
41	②	49	①	57	⑤	65	②	73	①
42	④	50	④	58	⑤	66	⑤	74	①
43	①	51	⑤	59	②	67	③	75	③
44	①	52	④	60	③	68	⑤	76	②
45	③	53	①	61	④	69	⑤	77	③
46	④	54	③	62	④	70	③	78	⑤
47	④	55	⑤	63	②	71	③	79	③
48	②	56	①	64	②	72	②	80	④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2교시	1 회계학 2 부동산관계법규	80분	A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3.28)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토기본법」 상의 국토종합계획

② 「도시개발법」 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정비계획

④ 「주택법」 상의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② 도로

③ 광장

④ 방범시설

⑤ 방수설비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

②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각각의 정비 주기로 옳은 것은?

① 3년 - 3년 ② 5년 - 3년 ③ 5년 - 5년

④ 10년 - 5년 ⑤ 10년 - 10년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주거환경의 정비

② 용도지구의 변경

③ 용도지역의 지정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⑤ 용도구역의 변경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포함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③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그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 여기서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다.)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지체 없이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큰 것은?

① 업무시설 ② 숙박시설

③ 판매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토지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A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정할 때 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4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③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⑤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공공도서관

② 119안전센터

③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④ 사회복지시설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56. 甲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매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① 공시지가

② 시장가격

③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

④ 주변지역 토지의 실거래가액

⑤ 매입가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② '토지등'에는 어업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③ 지가현황도면이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④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⑤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고 4개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선정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③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등록을 하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시장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제공되는 지가조사자료는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④ 6월 24일에 국유지가 매각되어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큰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인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없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

①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④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②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④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⑤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교통상황, 지세(地勢)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65. 국유재산법령상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존용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③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용폐지 없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대장과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항공기가 멸실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가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등기소의 장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매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총괄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 총괄청의 장의 허가 없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했다면 총괄청의 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②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매수한 경우

③ 매수자가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매수한 경우

④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69.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0.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71.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

③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높이 5미터의 굴뚝

② 높이 5미터의 광고탑

③ 높이 5미터의 기념탑

④ 높이 5미터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⑤ 높이 5미터의 장식탑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안쪽 어깨부분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② 지적도의 번호

③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④ 토지의 이동사유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목장용지”로 한다.

③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제방, 하천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를 제외한다.)

ㄱ.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ㄴ. 권리자
ㄷ. 채권액
ㄹ. 변제기
ㅁ.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ㅂ. 채권의 조건

① ㄱ, ㄴ ② ㄹ, ㅂ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78.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어 있을 때에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단독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8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매권실행등기
ㄴ. 권리소멸약정등기
ㄷ. 말소회복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ㅁ.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ㅂ.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2교시	1 회계학 2 부동산관계법규	80분	A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3.28)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구성요소 및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③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④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⑤ 자본은 소유주 지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2.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③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다가 당기에 자본잉여금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의미한다.

④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⑤ 기업은 재무성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특별항목을 비롯하여 추가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재량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인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20×2년 12월 31일 회수가능액은 ₩12,800,000이고, (주)한국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3년 12월 31일에는 회수가능액이 ₩16,000,000으로 회복되는 경우,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200,000 증가 ② ₩1,200,000 감소
③ ₩3,200,000 증가 ④ ₩3,200,000 감소
⑤ ₩4,200,000 증가

4.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감평이 20×2년 인식해야 할 재평가손실(당기손실)은?

○ 취득원가: ₩1,00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재평가모형 적용: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
○ 장부금액수정방법: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
○ 재평가잉여금의 처리: 당해 자산 제거시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음
○ 공정가치: 20×1년 말 ₩900,000, 20×2년 말 ₩500,000

① ₩75,000 ② ₩100,000 ③ ₩175,000
④ ₩200,000 ⑤ ₩275,000

5.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0에 구입하였는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한 결과,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7,000,000과 ₩6,000,000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20×2년 1월 1일 건물을 점검한 결과 연수합계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고,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되었다. 20×2년 말 재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한다.)

① 재평가이익(당기이익) ₩1,800,000

②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1,800,000

③ 재평가이익(당기이익) ₩80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1,000,000

④ 재평가이익(당기이익) ₩1,40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400,000

⑤ 재평가손실(당기손실) ₩1,800,000

6.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사옥신축을 위하여 (주)민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옥의 건설기간은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한국은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3,000,000과 ₩6,000,000을 지출하였다. 건설기간동안 (주)한국의 차입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A	B	C
차입금액	₩2,000,000	₩2,000,000	?
차입일	20×0.9.1	20×1.1.1	20×1.7.1
상환일	20×3.8.31	20×2.12.31	20×3.6.30
연이자율	10%	8%	10%
이자지급조건	매년말 후급		

차입금 A와 차입금 B는 일반차입금이며, 차입금 C는 동 사옥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 (주)한국은 차입과 동시에 사옥건설을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가 ₩135,000이라면, (주)한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C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① ₩750,000 ② ₩1,0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⑤ ₩3,000,000

7. (주)대한은 20×1년 초 정부보조금 ₩3,000,000을 지원받아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1,000,000)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대한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대한이 정부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① ₩1,000,000 ② ₩1,5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⑤ ₩3,000,000

8.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건물(공정가치 ₩200,000)이 세워져 있는 토지(공정가치 ₩600,000)를 ₩7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건물은 사용목적이 아니어서 취득 즉시 철거하였다.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20,000이 발생하였으며, 건물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는 ₩10,000에 처분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① ₩525,000 ② ₩600,000 ③ ₩610,000
④ ₩710,000 ⑤ ₩720,000

9.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공장건물을 ₩5,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대한은 공장건물에 대해 취득 이후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하였다(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0). (주)대한은 20×6년 1월 1일 공장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를 시작하였다. 분류변경 시점에서 잔여내용연수는 10년으로 재추정되었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20×6년 1월 1일 공장건물의 공정가치는 ₩3,800,000이었으며 20×5년 12월 31일까지 인식된 손상차손누계액은 ₩150,000이었다. 이러한 분류변경이 20×6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20×6년도 건물의 공정가치는 변동이 없다.)

① ₩380,000 감소 ② ₩180,000 감소
③ ₩50,000 증가 ④ ₩150,000 증가
⑤ ₩200,000 증가

10.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④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와 같은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원가 등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11. (주)한국의 20×1년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재고	당기매입
원가	₩14,000	₩51,000
판매가	15,000	85,000

20×1년도 매출(판매가)은 ₩74,000이고, 20×1년 말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16,000이다. (주)한국은 상품의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선택하였다.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에 따른 상품평가손실액의 차이는? (단, 평가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400 ② ₩600 ③ ₩900
④ ₩1,000 ⑤ ₩1,300

12.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④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⑤ 후입선출법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물량흐름과 반대라는 점, 재고층의 청산 시 수익·비용 대응구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비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13. 영업 첫 해인 20×1년 말 현재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현행대체원가 혹은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	1,000단위	₩500	₩ 350
제 품	2,000단위	2,700	3,000
상 품	1,500단위	2,500	2,350

(주)대한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며, 상품의 경우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적절한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도 (주)대한이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① ₩0 ② ₩225,000 ③ ₩275,000
④ ₩325,000 ⑤ ₩375,000

14.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TV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인도결제판매(cash on delivery sales)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가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③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⑤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제작이 완성되었을 때 인식한다.

15. (주)대한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기초재고는 ₩30,000이며 기말재고는 ₩45,000이다. 만일 평균법을 적용하였다면 기초재고는 ₩25,000 기말재고는 ₩38,000이다. 선입선출법 적용시 (주)대한의 20×1년 매출총이익이 ₩55,000이라면 평균법 적용시 (주)대한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① ₩43,000 ② ₩53,000 ③ ₩55,000
④ ₩57,000 ⑤ ₩67,000

16.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발 행 일: 20×1년 4월 1일
○ 상 환 일: 20×4년 3월 31일
○ 표시이자율: 연 8%
○ 유효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하고 월할계산한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기간 경과이자 포함)는 ₩1,010,000이다.

20×1년 12월 31일에 (주)감평이 인식해야 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단,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현가계수표

(3년 기준)	8%	10%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0.7938	0.7513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2.5771	2.4868

① 이익 ₩9,091 ② 이익 ₩48,488
③ 손실 ₩10,244 ④ 손실 ₩11,268
⑤ 손실 ₩11,512

17.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에 (주)민국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하고, 직접 관련된 수수료 ₩50,000을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동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각 연도 말 주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년말	20×2년말	20×3년말
₩1,200	₩950	₩1,050

(주)한국이 20×4년 1월 1일에 동 주식 전부를 ₩540,000에 처분하였다면 (주)한국이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4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① 손실 ₩5,000 ② 손실 ₩10,000
③ 손실 ₩15,000 ④ 이익 ₩15,000
⑤ 이익 ₩40,000

18. (주)대한은 다음의 사채를 사채권면에 표시된 발행일(20×1년 1월 1일)이 아닌 20×1년 4월 1일에 실제 발행하였다.

○ 만 기 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시장이자율이 연 12%일 경우, 20×1년 4월 1일의 사채발행이 동 시점의 (주)대한의 부채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를 이용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현가계수표

(3년 기준)	10%	12%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0.7513	0.7118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2.4868	2.4018

① ₩95,554 증가 ② ₩97,698 증가
③ ₩98,054 증가 ④ ₩100,000 증가
⑤ ₩102,500 증가

1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 ₩1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7%이고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채액면 ₩10당 1주의 보통주(액면가액 ₩5)로 전환
○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의 110%를 일시 상환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은 연 11%이었다. 20×2년 1월 1일 사채 액면금액의 35%가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권 행사가 20×2년 1월 1일 (주)한국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율 11%의 3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각각 0.7312와 2.4437이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86 증가 ② ₩1,750 증가 ③ ₩1,794 증가
④ ₩1,880 증가 ⑤ ₩3,544 증가

20. 건설업체 (주)감평은 20×1년 5월 1일 (주)대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공사기간은 2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최초 계약금액은 ₩100,000이었으며, 계약금액의 변동내역, 원가 등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 말 미청구공사 잔액은?

(단위: ₩)

연도	20×1	20×2	20×3	20×4
당기 계약금액의 증가분(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0	0	20,000	10,000
누적발생 계약원가	20,000	45,000	68,000	86,000
각 연도말에 추정한 예상추가원가	60,000	45,000	17,000	-
대금청구액	30,000	40,000	20,000	40,000
대금회수액	20,000	30,000	20,000	60,000

① ₩3,000 ② ₩4,000 ③ ₩5,000
④ ₩6,000 ⑤ ₩7,000

21. (주)대한은 20×1년도 말에 재고자산이 ₩20,000 증가하였고, 매입채무는 ₩15,000 감소되었으며, 매출채권은 ₩22,000 증가되었다. 20×1년도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이 ₩139,500이고, 매입채무현금지급액이 ₩118,000일 때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현금매입 및 현금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38,500 ② ₩44,000 ③ ₩48,500
④ ₩58,500 ⑤ ₩78,500

22.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제표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750 과소계상 되어있으나, 20×2년도 기말 재고자산은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다. 동 재고자산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주)한국의 20×1년도와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각각 ₩3,800과 ₩2,700이다. (주)한국은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자 한다. 20×1년 초 이익잉여금이 ₩11,500인 경우,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① ₩14,200 ② ₩15,200 ③ ₩15,950
④ ₩18,000 ⑤ ₩18,750

23. 20×1년도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82,000이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사채상환손실,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는 각각 ₩15,000, ₩10,000 및 ₩5,000이다.
○ 법인세비용은 ₩8,000이다.
○ 매출채권은 ₩20,000 증가하였다.
○ 재고자산은 ₩10,000 감소하였다.
○ 매입채무는 ₩15,000 증가하였다.

① ₩148,000 ② ₩157,000 ③ ₩163,000
④ ₩173,000 ⑤ ₩178,000

24.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리스기간: 3년(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자산 반환조건)
○ 매년 말 정기리스료: ₩150,000
○ 보증잔존가치: ₩30,000
○ 추정 무보증잔존가치: ₩20,000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0%

위의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 초 동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단, 이자율 10%의 3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각각 0.7513과 2.4868이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345,559 ② ₩360,585 ③ ₩388,086
④ ₩395,559 ⑤ ₩410,585

25.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이자부 받을어음 ₩1,000,000(만기 9개월, 표시이자율 연 10%)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20×1년 7월 1일 (주)대한은행에서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할인이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1,875 ② ₩5,000 ③ ₩7,250
④ ₩17,250 ⑤ ₩32,250

26.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④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⑤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27. (주)대한은 20×1년 12월 31일에 현금 ₩120,000을 지불하고 (주)민국을 합병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기타자산	₩20,000	₩ 24,000
유형자산	60,000	108,000
부채	40,000	40,000
자본	40,000	

(추가사항)
(주)민국은 자원유출가능성은 높지 않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우발부채가 있으며, 우발부채의 취득일 현재 신뢰성있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8,000이었다.

취득일에 합병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인식할 영업권은?

① ₩28,000 ② ₩36,000 ③ ₩40,000
④ ₩72,000 ⑤ ₩80,000

28. (주)대한의 현재 유동비율은 200%, 부채비율(=부채/자본×100)은 100%이다. 다음 거래 중 (주)대한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경우는?

①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② 선급보험료의 1년분 납부
③ 매입채무의 현금지급
④ 장기차입금의 현금상환
⑤ 상품의 외상매입

29. 20×1년 초 (주)대한의 납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Ⅰ. 자 본 금	
보통주(주당 액면가액 ₩5,000)	₩10,000,000
우선주(주당 액면가액 ₩5,000)	2,000,000
계	₩12,000,000
Ⅱ. 자본잉여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4,000,0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계	₩5,000,000

(주)대한은 20×1년 3월 1일에 보통주 400주와 우선주 100주를 ₩5,000,000에 현금발행하였으며, 발행 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각각 ₩10,000으로 동일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20×1년 12월 1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12,000인 보통주 1,000주를 발행하고 공정가치가 ₩8,000,000인 토지를 출자받았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은?

① ₩7,500,000 ② ₩8,000,000 ③ ₩9,000,000
④ ₩9,500,000 ⑤ ₩11,000,000

30.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주)서울의 의결권주식 30%(30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900,000이었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재고자산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비해 각각 ₩100,000과 ₩200,000 더 높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였다. (주)서울의 재고자산은 20×1년에 모두 판매되었다. 20×1년도 (주)서울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200,000이며 기타포괄이익은 ₩40,000이었다. (주)서울은 20×1년 12월 31일에 ₩3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대한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① ₩423,000 ② ₩461,000 ③ ₩483,000
④ ₩513,000 ⑤ ₩522,000

31. (주)감평은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동력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포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동력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이전,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와 배부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노무시간	2,000시간	2,400시간	3,200시간	2,400시간
기계시간	5,000시간	5,000시간	10,000시간	10,000시간
부문원가	₩40,000	₩35,000	₩150,000	₩100,000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면, 조립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 합계액은? (단, 보조부문 용역의 자가소비분은 무시한다.)

① ₩135,000 ② ₩185,000 ③ ₩190,000
④ ₩195,000 ⑤ ₩200,000

32. 감평회계법인은 컨설팅과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평회계법인은 일반관리비 ₩270,000을 용역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컨설팅과 회계감사서비스에 각각 45%와 55%씩 배부해 왔다. 앞으로 감평회계법인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활동별로 일반관리비와 원가동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일반관리비	원가동인
스탭지원	₩200,000	스탭수
컴퓨터지원	50,000	컴퓨터사용시간
고객지원	20,000	고객수
합계	₩270,000	

컨설팅은 스탭수 35%, 컴퓨터사용시간 30% 그리고 고객수 20%를 소비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컨설팅에 집계한 일반관리비는 이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① ₩32,500 감소 ② ₩32,500 증가
③ ₩59,500 감소 ④ ₩59,500 증가
⑤ 변화 없음

33.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주)감평은 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5,000단위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4,400단위
당기완성품수량	3,500단위

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① 50% ② 60% ③ 70% ④ 80% ⑤ 90%

34. (주)감평은 제조원가 항목을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로 분류한 후,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재공품(작업 No.23)의 원가는 ₩22,500이며, 당기에 개별 작업별로 발생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작업번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No.23	₩2,000	₩6,000
No.24	9,000	10,000
No.25	14,000	8,000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비례하여 예정배부한다. 기초에 직접노무원가는 ₩20,000으로 예측되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예측되었다. 기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No.25뿐이라고 할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① ₩34,000 ② ₩39,500 ③ ₩56,500
④ ₩62,000 ⑤ ₩73,500

35. (주)한국은 동일한 공정에서 A, B, C라는 3가지 결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결합원가 ₩1,600은 제품별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제품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품 단위당 매출총이익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제품명	A	B	C
생산량 및 판매량	100단위	300단위	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13	₩10	₩15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3	2	-
단위당 판매비	1	1	5

① A > B > C ② A > C > B ③ C > B > A
④ C > A > B ⑤ B > C > A

36. (주)감평은 제품A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고 있는데, (주)한국으로부터 제품A 2,000단위를 단위당 ₩70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품A의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20	직접노무원가	₩15
변동제조간접원가	10	고정제조간접원가	5

판매비와관리비는 모두 변동비로 매출액의 2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감평이 (주)한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액은?

① ₩2,000 ② ₩12,000 ③ ₩22,000
④ ₩40,000 ⑤ ₩50,000

37.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실제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해 20×1년 영업이익을 ₩65,000으로 보고하였다. (주)감평의 기초제품수량은 1,000단위이며, 20×1년 제품 20,000단위를 생산하고 18,000단위를 단위당 ₩20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00,000이고 기초제품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20×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1년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35,000 ② ₩40,000 ③ ₩55,000
④ ₩65,000 ⑤ ₩80,000

38. (주)감평은 이익중심점인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A사업부가 생산하는 열연강판의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는 각각 톤당 ₩2,000과 톤당 ₩200이며, 외부 판매가격과 판매비는 각각 톤당 ₩3,000과 톤당 ₩100이다. 현재 B사업부가 열연강판을 외부에서 톤당 ₩2,600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A사업부로부터 대체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사업부는 B사업부가 필요로 하는 열연강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대체하는 경우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사내대체가격은?

① ₩2,000 ② ₩2,100 ③ ₩2,200
④ ₩2,600 ⑤ ₩3,000

39.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제품 8,600단위를 생산하는데 24,000 직접노무시간이 사용되어 직접노무원가 ₩456,000이 실제 발생되었다.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75시간이고 표준임률이 직접노무시간당 ₩19.20이라면,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① ₩1,920 불리 ② ₩4,800 불리 ③ ₩4,800 유리
④ ₩6,720 불리 ⑤ ₩6,720 유리

40. (주)감평은 품질관련 활동원가를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및 외부실패원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자료 중 외부실패원가로 집계할 금액은?

제품보증수리활동	₩21,000
원재료 검사활동	11,000
직원 품질교육활동	50,000
고객서비스센터활동	6,000
불량품 재작업활동	8,000
설비보수 및 유지활동	5,000
판매기회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	18,000
공정검사활동	7,000
설계개선활동	10,000

① ₩35,000 ② ₩43,000 ③ ₩45,000
④ ₩53,000 ⑤ ₩57,000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토기본법」 상의 국토종합계획

② 「도시개발법」 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정비계획

④ 「주택법」 상의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② 도로

③ 광장

④ 방범시설

⑤ 방수설비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

②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각각의 정비 주기로 옳은 것은?

① 3년 - 3년 ② 5년 - 3년 ③ 5년 - 5년

④ 10년 - 5년 ⑤ 10년 - 10년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주거환경의 정비

② 용도지구의 변경

③ 용도지역의 지정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⑤ 용도구역의 변경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포함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③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그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 여기서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다.)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지체 없이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큰 것은?

① 업무시설 ② 숙박시설

③ 판매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토지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A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정할 때 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4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③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⑤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공공도서관

② 119안전센터

③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④ 사회복지시설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56. 甲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매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① 공시지가

② 시장가격

③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

④ 주변지역 토지의 실거래가액

⑤ 매입가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② '토지등'에는 어업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③ 지가현황도면이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④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⑤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고 4개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선정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③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등록을 하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시장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제공되는 지가조사자료는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④ 6월 24일에 국유지가 매각되어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큰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인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없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

①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④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②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④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⑤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교통상황, 지세(地勢)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65. 국유재산법령상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존용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③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용폐지 없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대장과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항공기가 멸실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가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등기소의 장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매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총괄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 총괄청의 장의 허가 없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했다면 총괄청의 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②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매수한 경우

③ 매수자가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매수한 경우

④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69.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0.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71.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

③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높이 5미터의 굴뚝

② 높이 5미터의 광고탑

③ 높이 5미터의 기념탑

④ 높이 5미터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⑤ 높이 5미터의 장식탑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안쪽 어깨부분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② 지적도의 번호

③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④ 토지의 이동사유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목장용지”로 한다.

③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제방, 하천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를 제외한다.)

ㄱ.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ㄴ. 권리자
ㄷ. 채권액
ㄹ. 변제기
ㅁ.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ㅂ. 채권의 조건

① ㄱ, ㄴ ② ㄹ, ㅂ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78.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어 있을 때에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단독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8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매권실행등기
ㄴ. 권리소멸약정등기
ㄷ. 말소회복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ㅁ.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ㅂ.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A-15-16-[2교시]

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문제지

교 시	과 목	시 간	문제형별
2교시	1 회계학 2 부동산관계법규	80분	B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자 유의사항 】

1. 문제지 표지와 문제지 내의 해당과목 및 문제형별 등의 동일여부와 총면수,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3.28)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답안 작성(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③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다가 당기에 자본잉여금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의미한다.

④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⑤ 기업은 재무성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특별항목을 비롯하여 추가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재량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구성요소 및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③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④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⑤ 자본은 소유주 지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3.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감평이 20×2년 인식해야 할 재평가손실(당기손실)은?

○ 취득원가: ₩1,00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재평가모형 적용: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
○ 장부금액수정방법: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
○ 재평가잉여금의 처리: 당해 자산 제거시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음
○ 공정가치: 20×1년 말 ₩900,000, 20×2년 말 ₩500,000

① ₩75,000 ② ₩100,000 ③ ₩175,000
④ ₩200,000 ⑤ ₩275,000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인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20×2년 12월 31일 회수가능액은 ₩12,800,000이고, (주)한국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3년 12월 31일에는 회수가능액이 ₩16,000,000으로 회복되는 경우,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200,000 증가 ② ₩1,200,000 감소
③ ₩3,200,000 증가 ④ ₩3,200,000 감소
⑤ ₩4,200,000 증가

5.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③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④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와 같은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원가 등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주)한국의 20×1년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재고	당기매입
원가	₩14,000	₩51,000
판매가	15,000	85,000

20×1년도 매출(판매가)은 ₩74,000이고, 20×1년 말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16,000이다. (주)한국은 상품의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선택하였다.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에 따른 상품평가손실액의 차이는? (단, 평가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400 ② ₩600 ③ ₩900
④ ₩1,000 ⑤ ₩1,300

7. 재고자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④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⑤ 후입선출법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물량흐름과 반대라는 점, 재고층의 청산 시 수익·비용 대응구조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비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8. 영업 첫 해인 20×1년 말 현재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량	단위당 원가	단위당 현행대체원가 혹은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	1,000단위	₩500	₩ 350
제 품	2,000단위	2,700	3,000
상 품	1,500단위	2,500	2,350

(주)대한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며, 상품의 경우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적절한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도 (주)대한이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① ₩0 ② ₩225,000 ③ ₩275,000
④ ₩325,000 ⑤ ₩375,000

9.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TV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인도결제판매(cash on delivery sales)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가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③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의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⑤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제작이 완성되었을 때 인식한다.

10.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0에 구입하였는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한 결과,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7,000,000과 ₩6,000,000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20×2년 1월 1일 건물을 점검한 결과 연수합계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고,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되었다. 20×2년 말 재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한다.)

① 재평가이익(당기이익) ₩1,800,000

②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1,800,000

③ 재평가이익(당기이익) ₩80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1,000,000

④ 재평가이익(당기이익) ₩1,400,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400,000

⑤ 재평가손실(당기손실) ₩1,800,000

11.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사옥신축을 위하여 (주)민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옥의 건설기간은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주)한국은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3,000,000과 ₩6,000,000을 지출하였다. 건설기간동안 (주)한국의 차입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A	B	C
차입금액	₩2,000,000	₩2,000,000	?
차입일	20×0.9.1	20×1.1.1	20×1.7.1
상환일	20×3.8.31	20×2.12.31	20×3.6.30
연이자율	10%	8%	10%
이자지급조건	매년말 후급		

차입금 A와 차입금 B는 일반차입금이며, 차입금 C는 동 사옥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 (주)한국은 차입과 동시에 사옥건설을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옥건설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가 ₩135,000이라면, (주)한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C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① ₩750,000 ② ₩1,0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⑤ ₩3,000,000

12. (주)대한은 20×1년 초 정부보조금 ₩3,000,000을 지원받아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1,000,000)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대한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대한이 정부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① ₩1,000,000 ② ₩1,5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⑤ ₩3,000,000

13.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건물(공정가치 ₩200,000)이 세워져 있는 토지(공정가치 ₩600,000)를 ₩7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건물은 사용목적이 아니어서 취득 즉시 철거하였다.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20,000이 발생하였으며, 건물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는 ₩10,000에 처분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① ₩525,000 ② ₩600,000 ③ ₩610,000
④ ₩710,000 ⑤ ₩720,000

14.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공장건물을 ₩5,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대한은 공장건물에 대해 취득 이후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하였다(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0). (주)대한은 20×6년 1월 1일 공장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투자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임대를 시작하였다. 분류변경 시점에서 잔여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재추정되었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20×6년 1월 1일 공장건물의 공정가치는 ₩3,800,000이었으며 20×5년 12월 31일까지 인식된 손상차손누계액은 ₩150,000이었다. 이러한 분류변경이 20×6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20×6년도 건물의 공정가치는 변동이 없다.)

① ₩380,000 감소 ② ₩180,000 감소
③ ₩50,000 증가 ④ ₩150,000 증가
⑤ ₩200,000 증가

15.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④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⑤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16. (주)대한은 20×1년 12월 31일에 현금 ₩120,000을 지불하고 (주)민국을 합병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기타자산	₩20,000	₩ 24,000
유형자산	60,000	108,000
부채	40,000	40,000
자본	40,000	

(추가사항)
(주)민국은 자원유출가능성은 높지 않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우발부채가 있으며, 우발부채의 취득일 현재 신뢰성있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8,000이었다.

취득일에 합병과 관련하여 (주)대한이 인식할 영업권은?

① ₩28,000 ② ₩36,000 ③ ₩40,000
④ ₩72,000 ⑤ ₩80,000

17. (주)대한의 현재 유동비율은 200%, 부채비율(=부채/자본×100)은 100%이다. 다음 거래 중 (주)대한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경우는?

①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② 선급보험료의 1년분 납부
③ 매입채무의 현금지급
④ 장기차입금의 현금상환
⑤ 상품의 외상매입

18. 20×1년 초 (주)대한의 납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Ⅰ. 자 본 금	
보통주(주당 액면가액 ₩5,000)	₩10,000,000
우선주(주당 액면가액 ₩5,000)	2,000,000
계	₩12,000,000
Ⅱ. 자본잉여금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4,000,0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계	₩5,000,000

(주)대한은 20×1년 3월 1일에 보통주 400주와 우선주 100주를 ₩5,000,000에 현금발행하였으며, 발행 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각각 ₩10,000으로 동일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20×1년 12월 1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12,000인 보통주 1,000주를 발행하고 공정가치가 ₩8,000,000인 토지를 출자받았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은?

① ₩7,500,000 ② ₩8,000,000 ③ ₩9,000,000
④ ₩9,500,000 ⑤ ₩11,000,000

19.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주)서울의 의결권주식 30%(30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900,000이었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재고자산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비해 각각 ₩100,000과 ₩200,000 더 높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였다. (주)서울의 재고자산은 20×1년에 모두 판매되었다. 20×1년도 (주)서울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200,000이며 기타포괄이익은 ₩40,000이었다. (주)서울은 20×1년 12월 31일에 ₩3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대한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① ₩423,000 ② ₩461,000 ③ ₩483,000
④ ₩513,000 ⑤ ₩522,000

20. (주)대한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기초재고는 ₩30,000이며 기말재고는 ₩45,000이다. 만일 평균법을 적용하였다면 기초재고는 ₩25,000 기말재고는 ₩38,000이다. 선입선출법 적용시 (주)대한의 20×1년 매출총이익이 ₩55,000이라면 평균법 적용시 (주)대한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① ₩43,000 ② ₩53,000 ③ ₩55,000
④ ₩57,000 ⑤ ₩67,000

21. (주)감평은 20×1년 4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발 행 일: 20×1년 4월 1일
○ 상 환 일: 20×4년 3월 31일
○ 표시이자율: 연 8%
○ 유효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하고 월할계산한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기간 경과이자 포함)는 ₩1,010,000이다.

20×1년 12월 31일에 (주)감평이 인식해야 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단,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현가계수표

(3년 기준)	8%	10%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0.7938	0.7513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2.5771	2.4868

① 이익 ₩9,091 ② 이익 ₩48,488
③ 손실 ₩10,244 ④ 손실 ₩11,268
⑤ 손실 ₩11,512

22.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에 (주)민국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하고, 직접 관련된 수수료 ₩50,000을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동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각 연도 말 주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년말	20×2년말	20×3년말
₩1,200	₩950	₩1,050

(주)한국이 20×4년 1월 1일에 동 주식 전부를 ₩540,000에 처분하였다면 (주)한국이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4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① 손실 ₩5,000 ② 손실 ₩10,000
③ 손실 ₩15,000 ④ 이익 ₩15,000
⑤ 이익 ₩40,000

23. (주)대한은 다음의 사채를 사채권면에 표시된 발행일(20×1년 1월 1일)이 아닌 20×1년 4월 1일에 실제 발행하였다.

○ 만 기 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시장이자율이 연 12%일 경우, 20×1년 4월 1일의 사채발행이 동 시점의 (주)대한의 부채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를 이용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현가계수표

(3년 기준)	10%	12%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0.7513	0.7118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2.4868	2.4018

① ₩95,554 증가 ② ₩97,698 증가
③ ₩98,054 증가 ④ ₩100,000 증가
⑤ ₩102,500 증가

2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 ₩1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7%이고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채액면 ₩10당 1주의 보통주(액면가액 ₩5)로 전환
○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의 110%를 일시 상환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은 연 11%이었다. 20×2년 1월 1일 사채 액면금액의 35%가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권 행사가 20×2년 1월 1일 (주)한국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율 11%의 3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각각 0.7312와 2.4437이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86 증가 ② ₩1,750 증가 ③ ₩1,794 증가
④ ₩1,880 증가 ⑤ ₩3,544 증가

25. 건설업체 (주)감평은 20×1년 5월 1일 (주)대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공사기간은 2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최초 계약금액은 ₩100,000이었으며, 계약금액의 변동내역, 원가 등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3년 말 미청구공사 잔액은?

(단위: ₩)

연도	20×1	20×2	20×3	20×4
당기 계약금액의 증가분(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0	0	20,000	10,000
누적발생 계약원가	20,000	45,000	68,000	86,000
각 연도말에 추정한 예상추가원가	60,000	45,000	17,000	-
대금청구액	30,000	40,000	20,000	40,000
대금회수액	20,000	30,000	20,000	60,000

① ₩3,000 ② ₩4,000 ③ ₩5,000
④ ₩6,000 ⑤ ₩7,000

26. (주)대한은 20×1년도 말에 재고자산이 ₩20,000 증가하였고, 매입채무는 ₩15,000 감소되었으며, 매출채권은 ₩22,000 증가되었다. 20×1년도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이 ₩139,500이고, 매입채무현금지급액이 ₩118,000일 때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현금매입 및 현금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38,500 ② ₩44,000 ③ ₩48,500
④ ₩58,500 ⑤ ₩78,500

27.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제표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750 과소계상 되어있으나, 20×2년도 기말 재고자산은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다. 동 재고자산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주)한국의 20×1년도와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각각 ₩3,800과 ₩2,700이다. (주)한국은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자 한다. 20×1년 초 이익잉여금이 ₩11,500인 경우,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① ₩14,200 ② ₩15,200 ③ ₩15,950
④ ₩18,000 ⑤ ₩18,750

28. 20×1년도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82,000이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사채상환손실,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는 각각 ₩15,000, ₩10,000 및 ₩5,000이다.
○ 법인세비용은 ₩8,000이다.
○ 매출채권은 ₩20,000 증가하였다.
○ 재고자산은 ₩10,000 감소하였다.
○ 매입채무는 ₩15,000 증가하였다.

① ₩148,000 ② ₩157,000 ③ ₩163,000
④ ₩173,000 ⑤ ₩178,000

29.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리스기간: 3년(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자산 반환조건)
○ 매년 말 정기리스료: ₩150,000
○ 보증잔존가치: ₩30,000
○ 추정 무보증잔존가치: ₩20,000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50,000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0%

위의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 초 동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단, 이자율 10%의 3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와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각각 0.7513과 2.4868이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345,559 ② ₩360,585 ③ ₩388,086
④ ₩395,559 ⑤ ₩410,585

30.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이자부 받을어음 ₩1,000,000(만기 9개월, 표시이자율 연 10%)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20×1년 7월 1일 (주)대한은행에서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할인이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1,875 ② ₩5,000 ③ ₩7,250
④ ₩17,250 ⑤ ₩32,250

31. 감평회계법인은 컨설팅과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평회계법인은 일반관리비 ₩270,000을 용역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컨설팅과 회계감사서비스에 각각 45%와 55%씩 배부해 왔다. 앞으로 감평회계법인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활동별로 일반관리비와 원가동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일반관리비	원가동인
스탭지원	₩200,000	스탭수
컴퓨터지원	50,000	컴퓨터사용시간
고객지원	20,000	고객수
합계	₩270,000	

컨설팅은 스탭수 35%, 컴퓨터사용시간 30% 그리고 고객수 20%를 소비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컨설팅에 집계한 일반관리비는 이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① ₩32,500 감소 ② ₩32,500 증가
③ ₩59,500 감소 ④ ₩59,500 증가
⑤ 변화 없음

32. (주)감평은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동력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포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동력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기 이전,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와 배부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노무시간	2,000시간	2,400시간	3,200시간	2,400시간
기계시간	5,000시간	5,000시간	10,000시간	10,000시간
부문원가	₩40,000	₩35,000	₩150,000	₩100,000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면, 조립부문에 집계된 부문원가 합계액은? (단, 보조부문 용역의 자가소비분은 무시한다.)

① ₩135,000 ② ₩185,000 ③ ₩190,000
④ ₩195,000 ⑤ ₩200,000

33. (주)한국은 동일한 공정에서 A, B, C라는 3가지 결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결합원가 ₩1,600은 제품별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제품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품 단위당 매출총이익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제품명	A	B	C
생산량 및 판매량	100단위	300단위	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13	₩10	₩15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3	2	-
단위당 판매비	1	1	5

① A > B > C ② A > C > B ③ C > B > A
④ C > A > B ⑤ B > C > A

34.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주)감평은 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5,000단위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4,400단위
당기완성품수량	3,500단위

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① 50% ② 60% ③ 70% ④ 80% ⑤ 90%

35. (주)감평은 제조원가 항목을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로 분류한 후,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재공품(작업 No.23)의 원가는 ₩22,500이며, 당기에 개별 작업별로 발생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작업번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No.23	₩2,000	₩6,000
No.24	9,000	10,000
No.25	14,000	8,000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비례하여 예정배부한다. 기초에 직접노무원가는 ₩20,000으로 예측되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예측되었다. 기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No.25뿐이라고 할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① ₩34,000 ② ₩39,500 ③ ₩56,500
④ ₩62,000 ⑤ ₩73,500

36. (주)감평은 품질관련 활동원가를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및 외부실패원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자료 중 외부실패원가로 집계할 금액은?

제품보증수리활동	₩21,000
원재료 검사활동	11,000
직원 품질교육활동	50,000
고객서비스센터활동	6,000
불량품 재작업활동	8,000
설비보수 및 유지활동	5,000
판매기회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	18,000
공정검사활동	7,000
설계개선활동	10,000

① ₩35,000 ② ₩43,000 ③ ₩45,000
④ ₩53,000 ⑤ ₩57,000

37. (주)감평은 제품A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고 있는데, (주)한국으로부터 제품A 2,000단위를 단위당 ₩70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품A의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20	직접노무원가	₩15
변동제조간접원가	10	고정제조간접원가	5

판매비와관리비는 모두 변동비로 매출액의 2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감평이 (주)한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영업이익 증가액은?

① ₩2,000 ② ₩12,000 ③ ₩22,000
④ ₩40,000 ⑤ ₩50,000

38.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실제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해 20×1년 영업이익을 ₩65,000으로 보고하였다. (주)감평의 기초제품수량은 1,000단위이며, 20×1년 제품 20,000단위를 생산하고 18,000단위를 단위당 ₩20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고정제조간접원가가 ₩100,000이고 기초제품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20×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1년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35,000 ② ₩40,000 ③ ₩55,000
④ ₩65,000 ⑤ ₩80,000

39. (주)감평은 이익중심점인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A사업부가 생산하는 열연강판의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는 각각 톤당 ₩2,000과 톤당 ₩200이며, 외부 판매가격과 판매비는 각각 톤당 ₩3,000과 톤당 ₩100이다. 현재 B사업부가 열연강판을 외부에서 톤당 ₩2,600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A사업부로부터 대체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사업부는 B사업부가 필요로 하는 열연강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휴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내대체하는 경우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사내대체가격은?

① ₩2,000 ② ₩2,100 ③ ₩2,200
④ ₩2,600 ⑤ ₩3,000

40.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제품 8,600단위를 생산하는데 24,000 직접노무시간이 사용되어 직접노무원가 ₩456,000이 실제 발생되었다.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75시간이고 표준임률이 직접노무시간당 ₩19.20이라면,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① ₩1,920 불리 ② ₩4,800 불리 ③ ₩4,800 유리
④ ₩6,720 불리 ⑤ ₩6,720 유리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주거환경의 정비
② 용도지구의 변경
③ 용도지역의 지정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⑤ 용도구역의 변경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토기본법」 상의 국토종합계획
② 「도시개발법」 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정비계획
④ 「주택법」 상의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② 도로
③ 광장
④ 방범시설
⑤ 방수설비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
②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각각의 정비 주기로 옳은 것은?

① 3년 - 3년 ② 5년 - 3년 ③ 5년 - 5년
④ 10년 - 5년 ⑤ 10년 - 10년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큰 것은?

① 업무시설 ② 숙박시설

③ 판매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토지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토지에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포함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③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그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 여기서의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다.)

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지체 없이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② '토지등'에는 어업권과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③ 지가현황도면이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④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⑤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고 4개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A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정할 때 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4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③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⑤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공공도서관

② 119안전센터

③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④ 사회복지시설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57. 甲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매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① 공시지가

② 시장가격

③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

④ 주변지역 토지의 실거래가액

⑤ 매입가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③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등록을 하면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선정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교통상황, 지세(地勢)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에 적용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시장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제공되는 지가조사자료는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④ 6월 24일에 국유지가 매각되어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큰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인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없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

①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④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②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④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⑤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ㄷ.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65.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 국유재산법령상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존용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만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③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용폐지 없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대장과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항공기가 멸실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가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등기소의 장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매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총괄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6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 총괄청의 장의 허가 없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했다면 총괄청의 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9.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매각계약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②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매수한 경우

③ 매수자가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매수한 경우

④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70.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71.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높이 5미터의 굴뚝

② 높이 5미터의 광고탑

③ 높이 5미터의 기념탑

④ 높이 5미터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⑤ 높이 5미터의 장식탑

72. 건축법령상 건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

③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제방, 하천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안쪽 어깨부분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② 지적도의 번호

③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④ 토지의 이동사유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과수원"으로 한다.

②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는 "목장용지"로 한다.

③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매권실행등기
ㄴ. 권리소멸약정등기
ㄷ. 말소회복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ㅁ.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ㅂ.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78.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를 제외한다.)

ㄱ.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ㄴ. 권리자
ㄷ. 채권액
ㄹ. 변제기
ㅁ.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ㅂ. 채권의 조건

① ㄱ, ㄴ ② ㄹ, ㅂ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79.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어 있을 때에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8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단독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B-15-16-[2교시]